제5차('25~'29) 농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 (요약)

Ⅰ 수립 배경

□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은 **5년마다**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」을 **수립**하도록 규정

기본방침의 범위 및 성격

- ㅇ 시간적 범위 : 2025년 ~ 2029년
- ㅇ 공간적 범위 : 농어촌
- ㅇ 기관의 범위 : 민·관 합동의 '삶의 질 향상 위원회(위원장: 국무총리)'를 중심으로 21개 부·청*이 협력하여 수립하는 범정부 협업계획

* 농식품부, 기재부, 교육부, 과기부, 행안부, 문체부, 산업부, 복지부, 환경부, 고용부, 여가부, 국토부, 해수부, 중기부, 국조실, 경찰청, 해경청, 소방청, 통계청, 농진청, 산림청 등

ㅇ 정부는 **한-칠레 FTA 협정 발효**를 계기로 '04년 특별법을 제정, 20년간 총 4차례의 기본계획 수립, 총 178조원 투·융자(계획대비 17% 증가)

□ '05년 이후 4차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어촌 생활인프라 확충 등의 성과는 있었으나, **농어촌 소멸 문제의 근본적 해결**에는 **역부족**

ㅇ 보건·복지, 교육·문화, 정주여건, 경제·일자리 등 분야별 **도시와 농촌 간 정주만족도 격차**도 **여전**한 상황

* 도·농간 만족도 격차('24) : 보건·복지 1.4점, 교육·문화 0.9, 정주기반 0.4, 경제·일자리 0.4

ㅇ 다만, 쾌적한 환경, 도시 대비 저렴한 토지 비용, 4도3촌 라이프 문화 확산 등 **농어촌만**이 가진 **기회요인**도 **존재**

□ 금년은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('20~'24) 이후 변화된 정책 환경과 농어촌의 향후 전망에 기초하여 **새로운 5년을 준비**할 시점

⇒ 당면한 **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**과 **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**을 위한 **중장기 로드맵** 제시 → 농어촌을 **국민을 위한 기회의 장**으로 전환

Ⅱ 20년간 기본계획 성과 및 한계

[종합]

□ **(인구)** 농어촌(읍·면) 인구는 귀농·귀촌 증가, 삶의 질 정책 추진 등으로 '10년 이후 상승세로 전환해 **전체 인구의 18.5% 내외 유지**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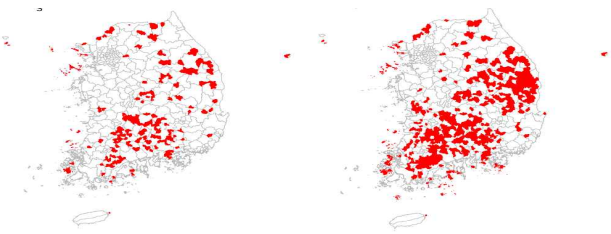
* 농어촌인구 : ('70) 1,867만명(59.0%) → ('10) 876(18.0%) → ('20) 976(18.8%) → ('23) 967(18.7%)

○ 다만, 국가 전체적 인구감소 전망과 **청년층의 도시 쏠림** 및 **급속한 농어촌 고령화**로 현 상황 지속 시 **농어촌 소멸**이 **우려**되는 상황

* 농어촌 청년/고령인구(농어촌인구 대비 비중) : ('10) 202(23%)/181만명(21%) → ('23) 206(21%)/249만명(26%)

○ 또한, 읍·면단위 **인구 과소지역** (인구 2천명 미만 읍·면)*이 **증가**하는 추세

* 인구 과소지역 : ('00) 177개소(12.5%) → ('23) 392개소(27.8%)



<인구 과소지역 읍·면 현황('00→'23)>

□ **(삶의 질)** '14년 이후 **도·농간 정주 만족도 격차**는 전반적으로 **줄어들었으나, 보건·복지 분야**는 체감할만한 변화가 없었음

구분	전체	보건·복지	정주기반	교육문화	경제·일자리
'14~'24 도·농간 격차(점)	1.6→0.8	1.4→1.4	1.4→0.4	2.4→0.9	1.1→0.4

<보건복지>

<정주기반>

<교육문화>

<경제·일자리>

* 어촌의 경우 도시와 약 1.1점 정도의 격차 발생

□ **(행복도)** '14년 이후 농어촌 주민의 삶에 대한 행복감*은 증가 추세

* ('14) 58.7점 → ('19) 60.3점 → ('23) 62.2점 (농진청)

□ **(추진체계)** 삶의 질 정책에 **지자체 참여** 부족, **계획 추진상황 평가·환류체계 미흡** 등이 **한계**로 지속 지적

[분야별]

□ (**정주여건**) 상·하수도*, 도시가스 보급률 제고 등 **인프라 큰 폭 개선**

* 상수도 보급률(면지역): ('13) 66.4% → ('23) 83.5 (17.1%p↑, 전국 2.1%p↑)
* 하수도 보급률(군지역): ('13) 63.7% → ('23) 77.8 (14.1%p↑, 전국 3.3%p↑)
* 도시가스 보급률(읍지역) : ('13) 47.9% → ('23) 72.7 (24.8%p↑)

○ 인구 과소지역이 늘어나면서 소매점이 없는 **식품사막**이 **증가**하고, 주유소, 미용실 등 **생활서비스 감소 심각**

□ (**경제·일자리**) 산업단지 조성,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등 기회가 확대되면서 **농어촌** 소재 **사업체 수·창업기업 수** 연평균 증가율은 **전국 대비 상회**

* 사업체 수 연평균 증가율('10~'22) : (농어촌) 6.6%, (전국) 5.2%
* 창업기업 수 연평균 증가율('10~'22) : (농어촌) 7.5%, (전국) 4.7%

○ 농어촌 소멸 대응을 위해 경제활력 증진이 중요하나, **도시 대비 일자리**는 여전히 **부족***

* 사업체 수('22) : 도시 479만 개, 농어촌 135만 개 (3.6배 차이)

□ (**보건·복지**) 농어촌 보건·의료기관 수는 증가*했고, 주민 참여 경제·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(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, '23.8)

* 보건·의료기관 수 : ('20) 8,030개소 → ('23) 8,232

○ 도·농 간 의료격차가 심각*하고, **돌봄 사각지대 해소** 필요성 제기

* 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률('22): 서울 89.5%, 충남 67%, 경북 63.9%

□ (**교육·문화**) 교육 및 문화시설에 대한 최소 수준의 접근성 개선*

* '23년 농어촌서비스기준 분석결과, '20년 대비 초중등교육, 문화, 도서관, 체육시설 접근성 개선

○ 도시 수준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현실적·구조적으로 어려우므로 오히려 **농어촌**에 **특화**된 **교육·문화 환경 조성** 필요성 제기

Ⅲ 비전 및 전략

1. 기본방향

◇ 이번 **제5차 기본계획**은 그간 4차례의 기본계획과 달리 농어촌의 **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**을 **최우선 전략**으로 **재편**

○ **3대 부문 12대 주요 과제 및 총 180개 세부과제 추진**

◇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→ 생활인구 유입 + 주거 여건 개선 + 공공·생활 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 → 도·농간 삶의 질 격차 해소 등 **선순환 구조 창출**

○ 삶의 질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**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도 평가 내실화** → **취약지역**의 **공공 및 생활서비스 상향 유도**

〈 새로운 삶의 질 정책 기조 〉

구분		기존 기본계획		제5차 기본계획
기본이념		도·농간 삶의 질 격차 완화	⇨	+ 농어촌에 특화된 성장전략 마련
정책 범위		농어촌의 다양한 세대·계층 포용 정주인구 유치	⇨	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장 + 생활인구 확대
전략	경제·일자리	농수산물 기반 1·2·3차 산업 연계	⇨	농촌융복합산업 + 지역 특화산업 육성
	정주기반	중심지 기능 강화		+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
	보건·복지	H/W 정비, 인프라 확충		S/W 강화, 사각지대 해소
	교육·문화	기회의 형평성		농어촌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
추진 체계	평가	농어촌서비스기준 (시·군 단위)	⇨	농어촌서비스기준 (읍·면 단위)
	환류	지자체 삶의 질 계획에 개선방안 마련		+ 삶의 질 위원회에서 서비스 취약지역 문제 해결방안 모색

2. 비전 및 전략

비전

모두가 행복한 농어촌,
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성장 공간

목표

◈ (경제 · 일자리) 농어촌 사업체 수 : ('22) 135만개 → ('29) 189 (연평균 5%↑)
◈ (생활인구) 농어촌 지역 생활인구 연평균 3% 증가
◈ (정주만족도) 도 · 농간 삶의 질 격차 : ('24) 0.8점 → ('29) 0.4점

전략 및 과제

3대 추진전략	12대 주요 과제(총 180개 세부과제)
1. 농어업 · 농어촌 자원 활용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	▪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촉진 ▪ 어메니티 기반 서비스산업 활성화 ▪ 농어촌 혁신을 이끌 인력 양성
2. 농어촌 주거 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	▪ 농어촌 주거 여건 개선 ▪ 생활인구 · 관계인구 확대 기반 마련 ▪ 쾌적한 환경 및 안전한 공간 조성
3. 공공 및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	▪ 보건의료 서비스 여건 개선 ▪ 농어촌형 돌봄서비스 확충 ▪ 농어업인 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확충 ▪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▪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▪ 식품사막 및 교통 사각지대 최소화

추진 체계

▶ **삶의 질 정책 평가 · 환류체계 개선**
- ㅇ (평가) 농어촌서비스기준 강화 및 시행계획 평가제 개선
- ㅇ (환류) 농어촌서비스 취약지역 문제해결 컨설팅 제도 도입

▶ **삶의 질 정책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**

▶ **기업과의 다각적인 협업 모델 구축**

Ⅳ 3대 부문별 추진과제

[전략1] 농어업·농어촌 자원 활용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

◇ 농어촌에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**지역별 특화산업 육성** 및 어메니티 활용 **서비스산업 활성화** 등으로 **일자리 창출**

□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촉진

○ 지자체가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**기업 유치**를 **촉진**할 수 있도록 농촌특화지구 내 입지관련 규제 개선* 및 사업 집중 지원

* 농지전용 패스트트랙 도입(지구 지정단계에서 농지전용 협의), 농촌산업지구·융복합산업지구 농지전용권한 지자체 위임, 농촌특화지구내 목적시설 전용신고로 완화

< 상하농원(전북 고창) >

▸ 농식품부-매일유업-고창군이 조성한 **복합형 농촌체험공간**으로, 낙농을 테마로 농장, 지역 특산물 마켓, 스마트팜, 레스토랑, 숙박시설 등 운영(**연간 약 30만명 방문**, **고용인원 약 180명**)

- 소멸 위험 농촌지역을 혁신 거점으로 바꾸는 (가칭)자율규제혁신지구 법제화
- **농촌융복합산업 성장**을 **제한**하는 **손톱 밑 규제**도 **개선***

* 재배 한정 품목 지역 농산물 의무 사용(50%) 적용 제외, 농산물 이외 농촌자원 기반 사업유형 확대

○ 지역 내 **선도기업**을 **중심**으로 학계·연구계 및 전후방산업 업체를 **네트워킹**하는 **농산업 혁신벨트 구축 확대**

< 농산업 혁신벨트(경남 하동) >

▸ 청년 기업 육성 및 지역 농산업 활성화를 위한 거점화를 목표로 10개 기업이 공동 가공시설·물류센터·청년창업 활성화센터 조성

▸ 신제품 공동개발 및 공동 유통망 구축, 멘토링 및 전문 자문단 운영

- 어촌·도시·지역 특성에 맞춘 **바다생활권 경제·생활 거점 조성, 어촌발전특구 도입 추진**

○ 지역경제활성화펀드 결성 확대('25~'27, 640억원) 등 **민간 투자**를 **활성화**하고, 농식품·해양수산 분야 창업 촉진

- 지자체 농업 R&D 참여 확대 및 지역 특화산업 중심 R&D 지원

□ 어메니티 기반 서비스산업 활성화

○ 외국인이 농어촌에 찾아올 수 있도록 농어촌의 **관광자원**을 **연계**하는 **K-농산어촌 관광벨트 확대**(동서트레일, K-미식벨트 등)

< 동서 트레일(충남 태안~경북 울진) >

▸국내 첫 백패킹이 가능한 장거리 트레일

▸총 849km이며, 충남 태안군~경북 울진군까지 5개 시·도, 21개 시·군·구가 연결되며 '26년 완공 예정

- 세계중요농어업유산('25: 7개소 → '29: 14)을 관광 자원화하는 (가칭) **K-Heritage 프로젝트 추진**

○ 농촌 크리에이투어(매년 20개소), 자연휴양림, K-관광섬(7개, ~'26), 권역별 해양레저 허브 등 관광 인프라 지속 확충

- 관련 법 개정으로 농어촌 민박 운영 요건 완화* 등 제도 개선

* 면적 제한 완화(230m^2 미만→조례로 지정), 식사제공 허용(조식→석식도 가능)

○ 농업·산림·해양 **치유 관련 전문인력·인프라 확충***, 일-휴가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**농어촌형 워케이션 모델 개발·보급 확대**

* 치유농업 전문인력/인증농장(~'27, 2,150명/500개), 해양치유센터 등

□ 농어촌 혁신을 이끌 인력 양성

○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**지역**의 새로운 **가치**를 **창출**하는 **로컬크리에이터** 육성(~'29: 1,000개사)

- 푸드테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**계약학과**(9개교), **예비 창업자 대상 기술사업화 교육, 기업 인턴십 지원**(매년 300명) 등 추진

- 창업자 대상 콘테스트 개최 및 후속 성장 자금 지원으로 농촌에 다양한 사업모델 유입을 유도하고, 창업자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

○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청년들이 **농어촌**에 **정착**할 수 있도록 **농지·시설** 및 **초기 정착자금** 등 맞춤형 지원

-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생 대상 법률·세무 컨설팅 지원 등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, 농업인 유형별(예비농, 일반농·전문농) 기술교육 실시

○ 농어촌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청년·귀농귀촌인 창업공간으로 조성

[전략2] 농어촌 주거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

◇ **농어촌**이 국민의 삶터로서의 본래 **기능**을 **회복**하기 위해 주거여건 개선
◇ **생활인구**가 **정주인구**로의 **징검다리**가 되는 **선순환 체계 구축**

□ 농어촌 주거여건 개선

○ **농촌**을 **재구조화**하는 **중장기 농촌공간계획 수립**을 **의무화**('26년까지 139개 시·군 완료)하고, 지자체의 계획 수립 지원

- 마을 인근 난개발 시설 이전·철거 및 공간재생 지원('25: 112개소 → '29: 172)

○ 빈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**「빈집 정비 특별법*」 제정 추진**, **노후 주택 정비** 등 **기존 주거 인프라 개선**

* 특정 빈집에 대한 조치 간소화, 빈집 소유자의 정비 강화 유도 등

○ **지역활력타운** 및 **청년 보금자리 조성 확대***, 청년 바다마을(3개소),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물량 확대(1→3천호/年) 등 **신규 인프라 확충**

* 지역활력타운: ('25) 27개소 → ('29) 67, 청년 보금자리 준공 : ('25) 5개소 → ('29) 35

○ 난방비 경감을 위해 배관망 방식 LPG 공급 인프라 확충*, 비연륙 도서지역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지속 지원

* 마을단위('14~) : ('25) 390개소 → ('29) 498, 읍·면단위('24~'28) : ('25) 39개소 → ('28) 70

□ 생활인구·관계인구 확대 기반 마련

○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**농촌 체류형 쉼터 활성화**, **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**('25~'27, 3개소) 등 추진

- 빈집을 생활인구 유입공간으로 전환하도록 구역단위로 재생, 빈집 실태조사·빈집은행으로 민간 거래 활성화

○ 귀농어·귀촌 관련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그린대로 플랫폼, 귀어학교를 운영하고, 안정적 정착을 위한 컨설팅 제공

○ 고향사랑기부제, 행복농촌 서포터즈 등을 통해 농어촌 관계인구 확대

□ 쾌적한 환경 및 안전한 공간 조성

○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, 생활폐기물 수거 인프라 확충, 갯벌 생태계 복원 및 생태관광지역 확대('25: 40개소 → '29: 45) 등 **쾌적한 환경 조성**

○ 범죄예방활동 강화, 해양교통 관제구역 확대('25: 전체 해역의 46.5% → '29: 55), 농업·농촌분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**안전한 공간 조성**

[전략3] 공공 및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

◇ 보건의료, 돌봄, 복지, 교육, 문화, 교통, 식품 등 각 분야별 서비스 접근성 제고,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**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**

□ 보건의료 서비스 여건 개선

○ 농촌 왕진버스('25: 9만명 → '29: 18), 섬 주민 비대면 진료 제공,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국 확대 등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

- 여성농어업인 대상 특수 건강검진을 확대하고, 독거노인·장애인 대상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고도화

○ 지방의료원 신·증축, 응급·분만·소아청소년과가 부족한 취약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 설치·운영비 지원 등 인프라 확충

- 지역 거점 공공병원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병원 인력파견 지원

□ 농어촌형 돌봄서비스 확충

○ **농촌 지역 경제·사회서비스 주체 육성·역량 강화**

- 농촌 경제·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('25), 지자체 활성화 계획 수립
- 교육훈련기관 지정('25)을 통해 농촌 서비스 공동체 역량 강화·컨설팅 지원

○ 농번기 주말 돌봄제공 **대상·기간 확대***, 찾아가는 돌봄교실 및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등 **농어촌형 서비스 제공**

* 대상 연령(2세~초등학교 2학년 → 2세~초등학교 4학년), 운영기간(4~8개월 → 4~10개월)

○ 「돌봄통합지원법」 시행('26.3)에 발맞춰 의료·요양 통합돌봄 지원체계 마련, 한울타리유치원 조성 확대('25: 150개원 → '29: 230) 등 인프라 확충

□ 농어업인 복지 증진 및 사회안전망 확충

○ **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지원 확대**, 출산급여(총 150만원) 지원, 사고·질병 농어가도우미 지원 등 **사회보장 강화**

○ 농업수입안정보험 확대, 농어업인 안전보험('25: 101만명 → '29: 105), 농기계·어선원·어선 재해보험 지원 확대 등 **농어업인 재해 보장체계 강화**

○ 농지이양 은퇴직불제·농지연금 개선, 어촌마을 자치연금 확대, 기초연금 인상 및 노인일자리 제공 등 **고령자 노후소득 안정화**

□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

○ 농어촌 자원 활용 **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·확산**, 특색있는 농어촌 학교 발굴, **통학버스 지원** 등 **농어촌 맞춤형 서비스 제공**

- 대학·기업과 농어촌 학생 연계 진로 프로그램 확대('25: 500회 → '29: 600), 지역 대학생·이주배경학생 멘토링 확대('25: 1,000명 → '29: 1,400) 등 **진로교육 강화**

○ 비문해·저학력 고령층 대상 문해교육 활성화('25: 23천명 → '29: 28),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확대 등 **평생교육 활성화**

○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학교복합시설 확충 및 학교시설 안전 강화

□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

○ 찾아가는 도서관·박물관, 구석구석 문화배달(문화가 있는 날, 공연·체험 프로그램 제공) 등 **찾아가는 서비스 확대**

○ 문화취약지역 선정 지표를 개선하고, **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 확대** 및 **1인당 사용 금액 상향** 등 취약계층 문화누림 기회 확대

○ 읍·면 복합서비스 거점시설, 유휴시설(노후산단 등)을 **문화예술단체**들의 공연·강의 등 **활동 공간**으로 **제공**

□ 식품 사막 및 교통 사각지대 최소화

○ 식품 사막* 최소화를 위해 이동식 '**가가호호 이동장터**' 확산('25: 9개 지구 → '29: 30)

* 전국 행정리 중 73.5%가 행정리 안에 소매점이 없는 것으로 조사(통계청)

- 반찬 배달, 이동식 빨래방, 목욕·이미용 등 공공서비스 통합 운영

○ 수요응답형 버스 등 농촌형 교통모델(~'29: 82개 군 유지), 택시 운임비 지원, 벽지노선 확대(시내버스→시외·고속) 등 **교통 사각지대 최소화**

< 현대자동차 셔클 프로그램(전남 영암) >

▸ 농촌형 교통(노선형)을 수요응답형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

* 삼호읍 대기시간 1시간 30분 → 26분(64분 절감, 71% 개선)
* 탑승객 수 150% 증가('23년 평균 3,489명/월→8,738/월)
* 운행시간 52분 → 16분(36분 절감)

Ⅴ 추진체계 혁신

1 삶의 질 정책 평가·환류체계 개선

○ (**평가**) 농어촌서비스기준 **목표 상향**, 평가 시 사용하는 **통계**의 **정확도 제고**, **평가단위 세분화**(시·군→읍·면) 추진

- 삶의 질 평가의 **실효성 제고**를 위해 **평가 방법 개선***

* (현행) 모든 과제(전문가 서면 평가) → (개선) 모든 과제(정량 평가) + 핵심 과제(전문가 서면 평가)

○ (**환류**) 농어촌서비스기준 평가 결과, **취약지역**(예: 하위 5개 시·군)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**컨설팅 제도** 도입

- (**정부**) 하위 5개 시·군은 필요로 하는 **정책·사업** 등을 **정부**에 **제안**하고, 삶의질 위원회를 통해 범부처가 협의·논의해 지원

- (**민간**) **농어촌상생협력기금** 활용, 해당 지역의 서비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**프로젝트 추진**

2 삶의 질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삶의 질 특별법 개정 추진

○ 농어촌 혁신을 주도할 **청년 세대의 유입 촉진**과 **그 자녀의 보육 여건 개선**을 위해 기본계획 마련 시 포함해야할 사항 추가

* (예) 농어촌의 경제·일자리 여건 개선, 청년 정착 지원, 영유아 보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등

○ 식품 사막 해소, 방문 진료 등 **서비스 취약문제 해소**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

3 기업과의 다각적인 협업 모델 구축

○ 민간 기업이 보유한 혁신기술과 인프라를 농어촌에 적용하여 **삶의 질**을 **개선**하는 '(가칭)**스마트 농촌 실험실**(R&D)' 추진

- 기존 **아날로그 방식의 서비스 전달 체계**를 **디지털**로 **전환***

* (예) IoT융합형 의료·보건서비스, 모빌리티 서비스, 무인배송체계 등

○ 기업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한 '농어촌 ESG 실천 인정제' 활성화